

일본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무기수출3원칙과 특정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김 진 기 (부경대학교)
(jkkim@pknu.ac.kr)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하에서 나타난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변화, 구체적으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는 일본 방위산업체의 해외진출과 공동연구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를 유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있었다. 이의 결과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는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무기수출3원칙 폐지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는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 강화로 나타나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일본의 방위산업, 방위산업의 산업적·기술적 토대, 무기수출3원칙, 특정비밀보호법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7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대폭적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군사적 역량(capability)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 2013년 12월 17일 각의결정되었던 세건의 방위정책문서, 즉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1018년도 무기조달계획)은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전수방위를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 신방위계획에서는 센카쿠(다오위다오)가 위치한 동중국해 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통합기동방위력'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육상총대, 수륙기동단과 같은 공격적인 부대와 신형장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

이 문건들을 전후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원칙이나 제도들을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형해화시켜 버렸다. 우선 2014년 4월 무기수출3원칙이 철폐되었다.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침이 각의결정되었다.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방침이 포함된 안보관련법을 성립시켰다. 이 법은 10개 법안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와 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월에는 무기수출과 국제공동개발,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창구역을 담당하는 방위장비청이 새롭게 방위성 외국으로 발족되었다. 이 외에도 특정비밀보호법이 공포(2013년)되어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공모죄의 취지를 포함한 조직범죄처벌법(2017년)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법적, 제도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전후의 일본이 안보 정책적 측면에서 견지해왔던 전수방위의 틀을 벗어나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많은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¹⁾ 그러나 전쟁이란 행위가 벌어졌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정책보다는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흔히 의도와 역량,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역량이다. 왜냐하면 의도는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역량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도는 지도자의 언설이나 방위백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1) 국내 언론의 대부분이 이러한 입장에서 방위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분석에 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두승(2013), 김준섭(2013), 김진기(2013; 2014), 문은석(2014), 박영준(2012; 2013; 2014), 최운도(2013)를 참고할 것.

통해서 나타나지만 군사적 역량의 경우 평가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접근의 어려움도 있다.

군사적 역량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력 또는 방위정책에 접근하는 연구로는 김진기((2013;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주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군사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본 방위산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 나타난 방위역량강화 움직임이 방위장비청의 설립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는 무기의 해외수출과 해외 방산업계와의 협력 등 방위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 재계의 꾸준한 압력이 작용한 것이었으며, 방위장비청의 설립 또한 일본 방위산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²⁾ 그의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나타난 방위정책 변화를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 기술적 토대 등과 연결시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시기에 나타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가 어떤 의도에서 나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군사적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양적 측면의 평가와 질적 측면의 평가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양적 측면의 평가란 병력수, 장비의 수 등과 같은 수량적 측면에서 비교한 군사력 평가로서 주로 재래식 전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이에 반해 질적 측면의 평가란 방위장비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다. 방위장비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197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기술이 방위장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도입됨으로써 한층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술이 방위장비에 적용되어 군수와 민수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어짐으로써 범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이 매우 중요해졌다. 즉 기술발달과 함께 군수기술과 민수기술의 엄격한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군수기술과 민수기술 간의 상호적용, 기술적 파급효과(spin-off, spin-on)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의 결과 과거와는 다르게 군수에 특화된 기술이 아닌 민수 부문에서의 기술에도 각국은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하에서 진행 중인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가 전수방위라는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2)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김진기는 또한 아베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자들의 군사적 연구 참여유도에 대한 일본학계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 (2015)를 참고할 것.

역량, 특히 기술적 측면의 역량강화를 겨냥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적 역량 가운데서도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측면에서 일본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아베 정권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 이후 방위기술 향상에 일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필자가 주목하는 군사관련 규범은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와 시행이다. 이 규범들의 포기 또는 시행은 일본의 방위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방위산업은 산업의 한 부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기술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선 방위산업이 무기와 같은 전쟁용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안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방위산업이 가진 산업적 성격은 국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경제성을 무시하고서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진기 2012, 15)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방위산업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현대의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결정체로 간주된다. IT관련부품,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등 민생분야와 겹치는 범용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이 활성화되면 그 성과를 민생부문으로 전용(spin off)하여 일반경제에도 부수적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하청기업에서도 선진적인 특수기능을 가진 폭넓은 기업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수기능공의 고용, 특수기술과 기능의 훈련과 계승, 생산시설의 건설과 자재조달 등에도 폭넓은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부양효과 또한 크다. 즉 기술발전과 함께 방위기술과 민수기술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수와 군수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범용기술의 우열에 의해 한 국가의 안보역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필자는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관련 규범, 특히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일본의 무기생산능력 향상과 선진방위기술의 확보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이 글에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기생산능력의 향상과 선진방위기술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아베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기수출

3원칙이 나타나게 되었던 시대적 환경과 이후 이것이 폐지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 이후 일본의 방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지향점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위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과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후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터부시해왔던 일본의 학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무기수출 3원칙의 폐기 : 전후의 흐름과 배경

1. 무기수출 3원칙의 전후 흐름

전후 일본이 무기수출을 삼가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1967년 사토 총리의 중의원 답변에서였다.(第55回衆議院決算委員会 第5号 1967/4/21) 그리고 이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3원칙’을 표명한 것은 미키 총리의 국회답변(1976년)에서였다.(第77回衆議院予算委員会 第18号 1976/2/27) 이후 일본 방위산업계의 시장은 국내로 제한되었다. 국내수요, 즉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한 자국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은 방위부문에 특화된 기업이나 군수매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³⁾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기수출3원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일본에서 무기의 수출이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에 한국전쟁이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에 방위산업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전으로 인한 특수가 당시 일본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야나가(Yanaga 1968))와 러탄(Ruttan 2001)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나가의 조사에 의하면 1951년 1월의 시점에서 일본의 생산능력 가운데 72%가 ‘방위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무기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일본 수출의 70%가 미국의 군수조달과 관련되어 있었고, 일본산업의 3/4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수조달이 사실상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에 결정적으

3)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도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군수비중이 10%를 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2012, 151-168)를 참조할 것.

로 기여했다고 할 수있다. 사무엘스(Samuels 1994) 또한 미군조달이 전후 일본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후 폐허상황이었던 일본의 방위산업이 회생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특수로 재개된 일본의 방위산업은 한국전 휴전과 함께 전쟁 특수가 축소되자 무기수출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무기수출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국으로도 수출시장이 확대되었다.(桜川明巧 1995, 84-85)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연합회 또한 이들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여 무기수출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經濟団体連合会 1978, 201-203)

무기수출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주장은 전쟁의 쓰라린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쟁관련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야당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 또한 전후의 폐허상황에서 벗어나 무기수출이 절박한 환경은 아니었다. 즉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 그리고 전후 지속되었던 전세계적 경제호황으로 일본경제 또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함으로써 무기수출이 일본 경제에 그다지 핵심적인 산업부문은 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전후 일본에서 나타났던 무기수출3원칙의 배경에는 무기수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군수산업이 아니라도 일본경제의 회복과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본정부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수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기술력이 우수성을 보이고 이러한 품목들이 군사 분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전후 일본은 수입기술의 흡수와 개량, 그리고 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의 기술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일본정부 또한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을 조직함으로써 일본 산업 전반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기술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며 첨단산업정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Patrick 1986, xi) 반도체로 상징되는 첨단산업에서 나타난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 1980년대 들어서였으며, 이 때부터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민간기업들의 기술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의 요구와 압력으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정책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일장비기술협회, 방위협력소위원회 등과 같은 방위산업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이 미국 무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무기수출3원칙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무기수출3원칙’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제공과 공동생산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자 미국이 불만을 제기,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의 결과 1986년 휴대용 SAM 관련기술의 미국제공을 시작으로 함선건조, FSX 관련기술, 지원전투기(F-2) 생산관련기술 등의 기술공여가 이루어졌다.(朝雲新聞社 2002, 720) 이와 같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개별안전별로 취해지던 예외조치는 노다 내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과거 개별적으로 예외화 조치를 취해왔던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평화공헌·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생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内閣官房長官談話 2011)

노다 정권에서 취해졌던 포괄적 예외화 조치는 아베 정권 들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2014년 4월 아베 내각에서 이루어진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각의결정은 예외화 조치로서 미국에 적용하던 원칙을 폐기하여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한 조치였다. 즉 무기수출3원칙을 대신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서는,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예외를 적용했던 종래 방침과는 다르게 조건을 충족시키면 수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베 내각에서는 예외화 조치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수출을 인정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의 결과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을 구속하고 있었던 무기수출3원칙이라는 굴레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요컨대 노다 내각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폐기되어 형해화되었다면, 아베 정권 들어서는 외형적으로도 폐기되어 버렸던 것이다.

2.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배경

1) 안보환경의 변화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의 무기수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이유는 안보환경의 변화, 방위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위기감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진기 2014) 우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란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으로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민주당 정권이 무너졌다. 이후 들어선 자민당의 아베정권은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전면에 표출하기 시작했다.⁴⁾ 사실 이러한 대립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 등이 필요했었지만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경제적 총규모는 이제 일본을 능가하게 되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력을 대외정책에 적극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변화 못지않게 일본의 대외정책 또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 충돌 사건으로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아베 총리 또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등과 같은 아베 정권의 주장은 일본의 대외정책을 묘사할 때 흔히 언급되던 반응국가(reactive state)(Calder 1998)로서의 일본 이미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즉 현재 동아시아 역내에서 나타나는 중일간의 갈등은 역내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구조적 성격과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국가전략 등이 얹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Takeuchi 2014; 박영준 2014; 이지원 2014; 서승원 2014) 중국의 부상과 팽창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시진핑 정권과 아베정권이 거의 동시에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났다.(서승원 2014)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라는 정책이 아베 정권 들어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안보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아베 정권 출범 후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방산지원, 과거 금지되었던 방산부문의 정부개발원조 지원 가능 등은 이러한 안보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김진기 2014)

2) 방위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변화라는 대외적 요인만으로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일면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를 이끈 요인으로서 안보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사실 일본의 무기수출원칙이 변경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압력이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가능했던 데에는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김진기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은 무기수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 외에도 무기수출금지원칙이 일본사회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도경제성장으로 군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 또한 거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일본의 대 중국인식변화는 역대 〈방위대장〉에서 기술된 중국관련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기(2014, 122)의 〈표 2〉를 참조.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거대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못지않게 일본정부와 타 자본의 반대가 심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되살아난 방위산업을 정부지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통산성 등의 시도에 대해 대장성 뿐 아니라 타 자본도 반대했다. 특히 대장성의 경우 전전 군부의 요구에 밀려 방만한 재정지출을 한 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이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전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김진기 2012, 208-218)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계 인사들은 한국전쟁 시기의 미군특수라는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군수생산에 회의적이었으며, 경공업계의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방위생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은행자본과 타 산업자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많은 보수 정치인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Samuels 1994, 146-147) 이의 결과 일본의 방산업계는 방산을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수에 역량을 집중시켰으며 전후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수부문에서의 이익을 바탕으로 군수에 치중하지 않으면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과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서 시작된 버블붕괴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일본의 산업계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방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수부문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한 방위산업체들은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생산의 증대로 이를 타개할 수도 없었다. 즉 군수부문의 시장은 국내시장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⁵⁾ 더군다나 방위장비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국내조달수량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방위산업계는 관련기술자와 생산설비유지 등의 측면에서 그 토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⁶⁾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후부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단련이

5) 사실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협소한 국내시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방위성의 조사에 의하면, 항공기 생산의 경우, 미국은 F-16/F-15이 각각 3천4백9십7기/천4백6십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은 F-2/F-15기가 각각 94기/189기 생산에 그치고 있다. 전차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만대와 1천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일본은 341대에 그치고 있다. 이지스함 또한 미국은 76척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은 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用に関する検討会(2010)을 참고하라. 전세계의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약 40조 엔에 이르지만 일본의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1조 6천억 엔에 불과하다.(『日本経済新聞』 2014/4/2)

6) 방산부문에서 일본이 특히 우려했던 분야는 항공기산업이었다. 왜냐하면 항공기산업은 기술과규모효과가 다른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항공기산업은 생산고라는 측면에서는 자동차산업의 3.4%에 불과하지만 기술과규모에 따른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기술과규모효과는 자동차산업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防衛産業・技術基盤研究会, 2000, p. 27)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과정에

무기수출의 완화를 일본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점은 바로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김진기 2013, 57-63)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이를 환영한 것이 방위산업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연합회가 이 조치를 “획기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社)日本経済団体連合 2011)함으로써 일본 산업계 전체가 이를 환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진출 또는 비대화에 대한 정관계의 비판세력 뿐 아니라 자본 내의 견제세력 또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일본 방위산업계의 기술적 위기감

무기수출정책 변화의 마지막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 산업의 기술적 토대와 관련된 것이다. 탈냉전 이후 무기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주된 흐름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공동연구와 개발, 생산의 움직임이다. 즉 탈냉전 이후 방위장비 또는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대형화되면서 한 나라 차원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게 되면서 국제공동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전되었다.⁷⁾ (防衛省 2010 ; 日本経済団体連合会防衛生産委員会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무기수출3원칙 때문에 국제공동연구와 개발, 생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의 결과 일본의 방산장비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타국과의 연계가 없이 완전히 고립됨으로써 소위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清谷信一 2010)

일본의 방위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됨으로써 관련인력과 기술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서 기술의 국산화 또는 토착화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온 일본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항공관련 인력과 기술의 보존은 절대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한정된 좁은 국내시장으로는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다. 일본항공우주공업회는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① 조업 감소로 인한 기술자, 생산설비, 인원의 이산(離散), ② 고정비부담증가 등에 의한 경영의 압박, ③ 뛰어난 고기술을 가진 중소하청기업의 퇴출 등으로 인한 하청기업유지의 어려움, ④ 계획축소 및 불투명화로 인한 인재, 설비투자의 억제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日本航空宇宙工業会 2012, 18)

- 7)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위시한 7개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된 F-35를 들 수 있다. 이의 예에서 보듯이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동생산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항공기 산업의 인력과 설비, 기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일본은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F-35의 생산과 정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西川純子 2012, 98) 이는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F-35의 정비(maintenance)거점을 일본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언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一般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2, p.1)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연구 인력의 활용이었다. 그러나 연구인력을 군사연구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무기수출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이 집중된 일본의 대학 또한 전후 군사연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일본의 경우 전후 군대가 해산되고 평화헌법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각 대학들에서도 군사적 연구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체와 학계, 군의 연계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물론 이 배경에는 전전의 군과 산업체, 그리고 대학 간의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산·학복합체’가 강고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전쟁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연구인력을 군사관련 연구에 활용하여 군사관련 연구의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전후 일본의 대학에서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군사관련 연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회하여 대학 연구인력의 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만든 것이 특정비밀보호법이다. 대학의 연구인력을 방위관련 연구에 끌어들여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Ⅲ. 특정비밀보호법과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1. 과학자들의 방위연구 참여 유도

전후 일본은 군대가 해산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평화국가를 선언했다. 과학자들 또한 전쟁에 협력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과학자가 군사연구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1949년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일본학술회의가 창립되었을 때 총회결의에서는 “과학이 문화국가 또는 평화국가의 기초”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뒤이어 1950년 총회결의에서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과학연구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 표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7년 총회에서는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성명”도 발표했다.(池内了 2015, 2)⁸⁾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8) 이 총회의 성명이 나오게 된 데에는 반도체 국제회의에서 미군으로부터의 자금원조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 대학, 연구기관 사이에 기술교류라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공포를 계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계와 방위성 간의 기술교류를 보게 되면, 2006년부터 7년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4건, 2014년에는 7건으로 급증하면서 학계의 군사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⁹⁾ 특히 2014년 5월 제2회 ‘우주에 관한 포괄적 미일회의’에서는 국방성, NASA, 방위성, JAXA 등이 참가하여 원격조작기술을 논의하고 있다.

학계와의 공동연구에 정부와 방위성이 쏟는 노력은 각종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3년 7월 발간한 “방위력의 존재양태 검토에 관한 중간보고”(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2013)에서는 “민생기술의 적극적 활용, 대학 등의 기초연구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13년의 <방위대강>에서도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대와 제휴를 충실히 함으로써 방위에도 응용가능한 민생기술(범용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한다”(国家安全保障会議及び閣議決定 2013)고 언급함으로써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을 방위부문에 참여시킬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4월 방위성은 ‘기술관리반’을 설치하여 공동연구체제를 갖추었으며, 2014년 6월에는 방위성이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을 마련하여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에 대하여 방위성이 독자적인 경쟁적 자금제공제도를 창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8월에는 군사기술발굴을 위하여 연간 20억엔의 기금제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로 유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池内了2014)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자금지원을 통하여 과학자를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 동원이라기보다는 연구비 지원을 통한 간접적 제휴관계로서 전후 미국에서 나타났던 방식이다.¹⁰⁾ 두 번째 방법은 범용기술

9) <표 1>은 과거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홈 페이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까지의 신규계약은 매년 1건 정도로서 2012년도에 계속 중인 공동연구는 9건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신규가 7건 증가하여 총 14건, 이후 급증하여 2014년도에는 20건, 2016년에는 누계 2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술협력 가운데 가장 많은 8건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東京新聞』 2016/5/16)

10) 과학자가 군사적으로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으로부터 특수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적 동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맨해튼 계획, 레이더와 제트기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후에는 군사연구소에 군사전문 과학자를 고용하여 무기개발 또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민간기술의 발굴과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소위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 방식”으로서 강제적 동원이 아닌 자금 지원을

또는 범용연구를 강조함으로써 군사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방식의 접근법이다. 일본의 경우 전전의 경험과 사회적 분위기로 군사적 용도의 연구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개발되는 첨단기술은 명확하게 ‘군사용’과 ‘민생용’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¹¹⁾ 즉 연구자들로 하여금 민생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사무기 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표 1〉 방위성기술연구본부와 연구협력을 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 일람

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15/4	육상장비연구소	가나자와공업대학	〈포괄협정〉 기계, 전자 및 화학분야 - 수중무인차량의 계측기술 기술정보교환 등 -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대처 기술의 기술정보교환 등.
2014/7	육상장비연구소	전력중앙연구소 및 도쿄공 업대학	- 레이저 계측분야 - 원격·비접촉계측기술
2014/6	육상장비연구소	치바대학	- 차량용엔진기술분야 - 엔진시뮬레이션 기술
2014/3	항공정비연구소 전자장비연구소 선진기술추진센터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항공우주분야 - 헬리콥터 기술정보교환 - 적외선센서 등의 기술정보교환 - 체공형(滯空型) 무인항공기기술
2014/3	기술개발관(선박담당) 함정장비연구소	해양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해양분야 - 자율형 수중무인탐사기분야 - 무인항주체(航走體) 및 수중음향분야

통한 군사용 기술개발이었던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반면 학자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1) 범용기술로서 민생과 군용으로 다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로봇과 나노기술, 바이러스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로봇기술은 인공지능과 IC기술, 그리고 전자회로가 결합된 대표적 분야이다. 원격조작과 인지기능을 갖춘 로봇을 통하여 병기, 무인폭격기, 수중무인탐사기와 어뢰, 원격조작기술 등이 적용된다. 나노기술의 경우 소형화학·생물·방사능동위원소병기에 적용될 수 있다. 곤충병기의 발명, 그리고 이들 무기 내에 독물과 병원균을 주입한다든지 이를 소형병기화하여 원격조작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범용기술개발은 사실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군사용 기술과 민생용 기술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진화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물론 연구자의 의도에 반하여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또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컨대 과학기술은 평화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에서 군사적 기술을 엄격하게 한정하기 어렵다.

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14/3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전자정보통신분야 - 고분해능영상레이더에 관한 기술정보 - cyber security 및 네트워크 가상화에 관 한 기술정보교환 등
2014/3	육상장비연구소	치바공업대학	- 로봇 기술연구 - 3차원지도구축기술 및 가혹환경 하에서의 이동체기술
2014/3	육상장비연구소	테이코헤이세이대학	- 폭약검지(檢知)기술 등
2013/10	함정장비연구소	수산종합연구센터 수산공학연구소	- 광대역음향신호분석분야 - 수중음향신호처리기술
2013/6	육상장비연구소	큐슈대학	- 폭약검지기술 등
2013/4	전자장비연구소 선진기술추진센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포괄협정〉 우주이용분야 - 적외선센서기술 등
2013/3	선진기술추진센터	이화학연구소	화학제 원격검지분야 등
2012/12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전자파응용분야 - 고분해영상레이더에 관한 기술정보 - 해양레이더관련기술
2012/11	육상장비연구소	게이오대학	- 수치해석기술 구축 등
2012/6	선진기술추진센터	요코하마국립대학	- 군(群)제어 및 협조제어기술분야 - 무인소형이동체 제어알고리즘 구축
2012/6	선진기술추진센터	도요(東洋)대학	- 생체신호처리기술분야 - 피로도(疲勞度) 조사 등
2010/9	선진기술추진센터	도쿄공업대학	- 공기압계측제어 기술정보교환
2009/12	선진기술추진센터	테이코헤이세이대학	-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대기중 미립자의 관측데이터 해석 등
2008/3	선진기술추진센터	오비히로(帯広)축산대학	-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시험평가 및 검지용 데이터베이스
2008/2	전자장비연구소	도쿄 소방청	- 통신분야 - 소프트웨어 무선기를 이용한 중계
2008/2	함정장비연구소	해상기술안전연구소	〈포괄협정〉 함정분야 등
2006/12	선진기술추진센터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포괄협정〉 생물제 검지 시스템 분야 - 대기중 미립자의 관측데이터 해석 등
2006/6	전자장비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포괄협정〉 정보보안분야

연구협력 체결년월	기술연구본부내의 부문	연구협력상대	기술분야·협력내용
2002- 2007	항공정비연구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구 항공우주기술연구소)	〈포괄협정〉 항공분야(2002/3) - 헬리콥터 기술정보교환(2005/5) 등.

자료 : 〈http://no-military-research.a.la9.jp/documents/collaboration_list.html〉

2. 특정비밀보호법 시행과 일본 학계의 군사연구

군사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이를 의식한 학자들의 군사연구 기피를 고려하여 아베정권이 마련한 것이 바로 특정비밀보호법이다. 특정비밀보호법¹²⁾ 2013년 12월 공포되어 1년 뒤인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연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누설하면 비밀누설죄가 적용되므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연구에 대해 간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타인 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이 방위성 또는 자위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기초연구라 할지라도 군사연구에 전용될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2002년 이후 방위성과 연구기관 사이에 연구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본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방위성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기 전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제1차 아베 내각 시기(2006.9-2007.8)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1〉에서 나타난 협력연구의 일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아베 내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방위성이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만들면서 그 배경에 대해 방위장비청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대와 제휴를 충실히 하여 방위에도 응용가능한 민생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한다”¹³⁾고 적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일본학술회의의 오오니시(大西隆) 회장은 “1950년과 67년 일본학술회의의 결의는 견지하지만, 그 당시와는 시대환경이 변화, 자위를 위해서는 군사연구는 허용된다”(池内了 2017, 42)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12) 특정비밀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법에 대한 수상관저의 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特定秘密保護法について”〈<http://www.kantei.go.jp/jp/pages/tokuteihimitu.html>〉를 참고할 것.

13) 방위장비청의 홈페이지 〈<http://www.mod.go.jp/atla/funding.html>〉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탈냉전과 함께 시작된 버블붕괴로 일본의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일본기업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지면서 대학의 재정적 환경 또한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배경에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학계에서 군사연구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池内了 2017)

1980년대까지 일본의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평화선언, 비핵선언, 평화헌장 등을 발표하여 군사적 연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베헤이렌 운동’ 등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과거 기업이 담당했던 실용적 인재양성은 이제 대학으로 넘어갔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재계요구에 따라 대학을 전문학교화하여 대학이 가진 지식자원을 실용적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초기에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학연계 움직임이었다.

이 무렵부터 대학이 가진 지식자원을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 기업의 연구위탁제도, 기부강좌, 기업의 연구, 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기업장학금, 교원겸업 등 대학을 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이 중개하여 현재는 산학관제휴로 정착되었다. 이후 국가재정절약을 위한 ‘행정개혁’이 진전되는 와중에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민영화와 정리통합이 논의되어 이후 2004년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인예산은 인건비, 교육경비와 연구경비 등 전체를 일반운영비교부금으로서 국비에 서 일괄교부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의 결과 대학 독자적인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문부성이 알선하는 특별운영비교부금이나 운영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나아가 문부성이 책정한 연구지원비 등에 각 대학이 응모하지 않으면 사업비 획득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池内了 2017, 44-45)

IV.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

1. 무기수출3원칙 철폐와 일본의 방위산업체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변화로는 산업계와

학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를 전후하여 일본의 방위산업계에서 나타난 변화는 국제공동연구와 개발의 움직임이다. ‘신원칙’발표 이전인 2013년 7월에 이미 방위성은 영국과 화학, 생물병기의 방호기술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와도 ‘신원칙’ 발표 이전에 이미 공동개발할 장비의 선정작업과 함께 수중항행 무인기 등의 장비개발을 위한 첫 번째 실무자협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日本經濟新聞 2014/05/02) 이후에도 영국 국방성이 공대공미사일의 공동개발¹⁴⁾에 대한 참가를 미쓰비시 전기에 타진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日本經濟新聞 2014/04/13) 이 외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최초로 영국과 차세대스텔스기의 공동연구에 대한 각서를 교환하기도 했다.(日本經濟新聞 2017/03/16)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 자국에 머물렀던 일본 방위산업계가 타국과의 공동연구,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타국과의 공동연구, 개발과는 달리 방위장비의 해외시장 개척은 그다지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신원칙’ 발표 이후인 4월 파리에서 개최된 무기전시회에 일본은 전후 최초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13개사가 참가하였다.(朝日新聞 2014. 6.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칙’ 이후 방위장비의 수출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신원칙’ 발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가 깊은 관심을 보였던 잠수함 수출과 대형정비계획은 2016년 4월 프랑스 DCNS가 선정됨으로써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일부 회사관계자는 수주할 경우 오히려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호주 노동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라고 해도 기술자 운영에 여유가 없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성능과 건조 노하우는 모두 고도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책임문제를 고려하면 현지생산에 간여하고 싶지 않다”(日本經濟新聞 2016/09/27) 등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조 엔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의 방위산업 수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무기수출금지에 대한 과거의 관성, 그리고 무기수출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장비이전 또는 무기수출에 대해서는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에 대한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전 방위대신 모리모토(森本敏)는 퇴역한 소해함정 등의 무상공여, 중고품 함정의 수출, 신 함정의

14) 유럽6개국의 공동개발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유럽이 공동출자한 군사기업 MB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이 출자하고 있다.

수출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중국해의 해양감시능력 향상이 요구되지만 이들 국가들이 감시위성보유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의 영상, 상업용 항적정보 등과 같은 저가격의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장비에 그치지 않고 C4I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훈련, 연습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비품이나 공동개발을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森本敏 2015, 158-15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무기이전3원칙의 철폐이후 당장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도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구난비행정(US2) 수출, 공적개발원조(ODA)의 군사적 이용금지 해제 등과 같은 접근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선언’ 이후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가능하다. 우선 선진국과는 방위장비의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구축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들과는 방산협력을 통한 안보협력의 강화에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공적개발원조(ODA)의 군사적 이용금지를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가 동남아에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 국가들은 남사군도, 서사군도 등의 도서를 둘러싸고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이 이들 국가에 대해 방위기술과 장비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진기 2014, 124)

2. 특정비밀보호법과 과학자들의 방위연구 참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軍)과 대학(學)의 기술교류는 방위성 기술연구본부가 주도하여 방위성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구협력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이후 방위장비청 산하)와 대학, 연구기관과의 사이에 공동연구 건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 정권 발족 이후인 2013년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성은 2015년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라는 경쟁적 자금제도(위탁연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연구자들이 응모하여 ‘방위장비품개발의 기초연구’를 행하는 제도로써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지금은 방위장비청 소속)가 주도하고 있다.

이 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진 첨단기술을 과학자로부터 공모, 발굴하여 미래의 방위장비나 무기개발을 고도화하고 육성한다는 것이다. 먼저 방위장비청

은 장래의 방위장비나 무기에 적용가능한 연구과제를 공모서류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과학자들로부터 이들 과제해결을 위한 연구제안을 받는다. 방위장비청은 이 제도가 ‘기초연구’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방위장비와 무기의 개발, 고도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의 기초연구와는 상당히 다르다.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예산은 2015년도에는 3억엔(9건 채택), 2016년도에는 6억 엔(9건 계속+10건 신규 채택)이었으나 2017년도 예산의 요구에서 방위성은 110억엔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각의결정되었다. 종래 건당 연 3천9백만 엔으로 3년 계속하는 것이 예산배분의 상한선이었으나 2017년도부터 5년 계속으로 총계 20억엔의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뿐 아니라 미국방성 DARPA의 자금에 의한 연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阿曾沼剛 2015, 15)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진행과정은 연구테마의 설정, 공모, 채택심사, 계약과 사업관리라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년간의 연구수행 후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듬해에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 최대 3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 간여하고 있는 인사는 “이 제도의 연구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임팩트(high risk high impact)’한 연구성과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탁연구가 성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연구성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시한 방법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도 성과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방위성으로서는 연구성과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도 일정 정도 허용한다는 것이다.(阿曾沼剛 2015, 15)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의 연구는 크게 전자재료·물성(物性)·광파(光波), 기계·제어, 정보·통신의 세 분야에서 28개의 연구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구라고는 하지만 소형비행체 기초기술, 항공기엔진용 발전기 기초기술, 극초음속비행엔진 실현을 위한 기초기술, 수중·육상 양용의 주변환경 인식 등 바로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阿曾沼剛. 2015, 1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응모상황을 소속기관별로 보게 되면 대학 등이 58건으로 53%, 공적 연구기관이 22건에 20%, 기업 등이 29건에 27%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학 등이 전체의 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표 3>은 주제별 응모과제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주제별로 보게 되면 전자재료·물성(物性)·광파(光波) 분야가 34건으로 31%, 기계·제어 분야가 33건으로 30%, 정보·통신 분야가 42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각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15년의 응모과제수

소속	응모수(비율)
대학 등	58건(53%)
공적연구기관	22건(20%)
기업 등	29건(27%)
합계	109건

〈표 3〉 주제별 응모 과제수(2015년)

연구 주제 분야별	응모수(비율)
전자재료 · 물성(物性) · 광파(光波)	34(31%)
기계 · 제어	33건(30%)
정보 · 통신	42건(39%)
합계	109건

이러한 과제연구는 그동안 군사관련 연구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과학자들을 군사연구로 유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방위성은 대학교원들을 방위성 군사연구개발의 외부평가위원으로 영입한다든지 공공정책 학부 또는 국제관계학부 등에 소속된 교원들과의 교류 확대, 안전보장과 관련된 세미나 또는 학생들의 인턴십 활동 등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¹⁵⁾ 요컨대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안보와 방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向直也 2012, 1001).

방위성은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뛰어난 장비품 발굴, 제조”와 “방위기술기반강화 · 민생기술기반으로의 파급”을 기대하고 있다. (阿曾沼剛, 2015, 12). 방위성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우선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사와 관련된 연구의 투명성이

15)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학계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적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일본학술회의의 3번째 성명(군사와 학술에 관한 성명)에서 학문의 자유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군사연구에 긍정적이었던 전임인 오오니시 회장에 대하여, 2017년 10월에 취임한 야마기와 준이치 회장은 군사연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범용기술, 대학 재정문제 등으로 군사연구가 허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군사와 학술’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학계의 현황이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학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을 우려하여 대외적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東京新聞』 2017/1/4) 또한 비밀의 영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연구비 사용이 불투명하게 처리됨으로써 연구비의 부정적 사용이나 유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向直也 2012, 1001-1006)

V.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와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이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기수출 3원칙의 포기로 일본의 방산기업들은 무기수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무기생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자위대 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른 국가의 군수업체들과 공동연구,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의 결과 일본의 방위산업체는 연구, 개발의 국제화 뿐 아니라 시장확대로 질적, 양적 확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원칙’이후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개발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방위장비의 수출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또한 직접적인 무기수출보다는 ODA를 통한 간접적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가 방위산업체를 염두에 둔 조치라면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산업체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왔다. 즉 전후 일본에서는 무기수출이 금지됨으로써 방위생산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나 기술의 개발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기피함으로써 방위생산의 기술적 토대도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이 처한 취약한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 토대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무기수출3원칙을 폐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를 구축함과 함께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와 시행으로 과학자들을 국방연구에 동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밀보호법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일본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기수출3원칙 폐지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 나타난 주된 움직임은 일본 방위장비의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타국, 특히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 정부와 방산업계에서 나타난 주된 움직임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이었다. 전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왔던 일본의 방산업계는 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산업의 국제적 동향, 최신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의 방산연구 참가는 과학자들의 방위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켜 방위산업 연구자와 기술자의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방위산업이 가진 안보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 중 기술적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방위산업이 가진 세 측면, 즉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해서 접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 세 측면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방위산업을 둘러싼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따라서 방위장비 또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을 고려하면 미군 장비와 완전 분리되어 운용될 수는 없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영향력이 거센 세계무기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파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방위산업정책에서 중점이 두어져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산업이 가진 안보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방위산업기술이 가진 범용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민수와는 고립된 방산품목이 설 자리가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정책의 강조점 또한 기술적 측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김두승. 2013.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韓日軍事文化研究 第16輯. 3-39.
- 김준섭. 2013. 미일안보협력강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국방연구 56(4). 1-24.
- 김진기. 2012. 일본의 방위산업 :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서울: 아연출판부.
- 김진기. 2013. 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재계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국방연구 56(4). 51-75.
- 김진기. 2014.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 전개과정, 배경, 의도. 국가전략 20(3), 107-134.
- 김진기. 2015. 일본에서의 군·학연계 : 아베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4. 196-221.
- 김진기. 2017.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 기술기반·강화전략. 국방연구 60(2). 53-78.
- 문은석. 2014.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 :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50輯. 85-103.
- 박영준. 2012.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 "기반적 방위력" 개념, "우주의 평화 이용원칙" 및 "무기수출3원칙" 개정을 중심으로. 韓日軍事文化研究 第14輯. 3-30.
- 박영준. 2013.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29(1). 91-121.
- 박영준. 2014.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30(1)(통권 제103호). 87-121.
- 이기완. 2013.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16(1). 126-142.
- 이지원. 2014.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 사회 101, 53-86.
- 조정남. 2014. 아베정권의 정치이념지향성과 '적극적평화주의'.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통권 제57호. 74-90.
- 최운도. 201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 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 국방연구 56(4). 25-50.

- 経済団体連合会. 1978. 経済団体連合会三十年史. 東京： 社団法人経済連合会.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12. 17.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12. 17. 平成26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 2014. 4. 1. 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12. 17. 平成26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4. 4. 1. 防衛装備移転三原則.
-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2013. 7. 26.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
- 防衛省. 2010. 12. 防衛生産技術基盤の維持育成に向けた防衛省の取り組み.
-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2013. 7. 26.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
-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用にに関する検討会. 2010. 8.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用に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
- (社)日本経済団体連合. 2011. 12. 27. 「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関する米倉会長コメント. 〈<http://www.keidanren.or.jp/speech/comment/2011/1227.html>〉 (검색일 2013. 5. 8)
-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防衛生産委員会. 2010. 7. 20. 欧州の防衛産業政策に関する調査ミッション報告.
- 森本敏. 2015. 防衛装備庁：防衛産業とその将来. 東京：海竜社.
- 西川純子. 2012. 武器の国際共同開発生産とF-35戦闘機. KEIZAI 2012-10. 92-101.
- 阿曾沼剛. 2015. 防衛省による技術取り込みのための新たな仕組み「安全保障技術研究推進制度」の創設について. CISTEC Journal 2015. 11 No.160.
- 桜川明巧. 1995. 日本の武器輸出政策—武器輸出三原則の国会論議をめぐって—. 日本国際政治学会. 国際政治 第108号. 84-100.

- 一般財団法人 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2. 10. 4. 新しい武器輸出政策と日米欧防衛企業の対応. (RIPS Policy Perspectives No. 16. RIPS公開セミナー2012シンポジウム報告書). ホテルグランドヒル市ヶ谷.
- 日本航空宇宙工業会. 2012. 平成24年版 日本の航空宇宙工業.
- 第77回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 第18号, 1976/2/27.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list.cgi?SESSION=830&SAVED_RID=6&MODE=1&DTOTAL=1&DMY=20876>
- 第55回衆議院決算委員会会議録 第5号, 1967/4/21. <http://kokkai.ndl.go.jp/cgi-bin/KENSAKU/swk_list.cgi?SESSION=830&SAVED_RID=4&MODE=1&DTOTAL=1&DMY=17023>
- 朝雲新聞社. 2002. 防衛ハンドブッカー平成14年版.
- 池内了. 2014. 8. 31. 科学と社会を巡る問題. 大学評価学会. 第44回研究会、公開シンポジウム〈科学、社会、大学〉.
- 池内了. 2015.1.21. 急進展する軍学共同. 第10回東職ランチョンセミナー 発表文.
- 池内了. 2017. 7. 軍事と科学. 学術の動向.
- 清谷信一. 2010. 防衛破綻ー「ガラバガス化」する自衛隊装備. 東京: 中公新書ラクレ.
- 特定秘密保護法について(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2014年 12月 10日)<<http://www.kantei.go.jp/jp/pages/tokuteihimitu.html>>(검색일 2015/09/22)
- 向 直也. 2012. ‘安全保障’名の下に現れる‘利権’の巣窟. 科学 2012年 9月号.
- Calder, Kent. 199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517-541.
- Samuels, Richard J. 1994. Rich Nation Strong Army.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Takeuchi, H. 2014. Sino-Japanese relations : power, interdependence, and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4. 7-32.
- Yanaga, Chitoshi. 1968. Big Business in Japanese 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uttan, Vernon W., 2001. Technology, Growth,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trick, Hugh. 1986. Japan's High Technology Industries: Lessons and Limitations of Industrial Polic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東京新聞 2017/01/04
- 東京新聞 2016/05/16
- 日本經濟新聞 2016/09/27
- 日本經濟新聞 2014/05/02
- 日本經濟新聞 2017/03/16
- 日本經濟新聞 2014/04/13
- 朝日新聞 2014/06/17

● 투고일: 2019.01.21. ● 심사일: 2019.01.23. ● 게재확정일: 2019.02.11.

| Abstract |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of Abe Administration

Kim Jink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defense-related norms change of Abe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intention of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during Abe administration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nd defense technology base of Japan.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was taken for not only the overseas expansion of Japanese defense industries but also the joint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defense industries. The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was made for the inducement of scientists to the defense-relate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after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military capability of Japan was strengthen in terms of the defense technology base as well as the defense industrial base.

〈Key words〉 Defense industry of Japan, Defense industrial-technological bas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